

## 한국 다문화사회에 관한 고찰:

다문화정책, 사회적 자본, 부패 중심으로

A Study on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Focusing on Multi-cultural Policy, Social Capital, and Corruption

김 수 진(Kim, Su Jin)\*

### ABSTRACT

Korea is changing rapidl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various domestic factors. This phenomenon has caused many problems in the Korean society, so reasonable measures are required.

The study looked at the problems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nts, Korean and a whole society, and then tried to find out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Some of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rom the viewpoint of migrants, discriminatory treatment became a problem, and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reverse discrimination became a matter. Social integration has become a major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a whole society. In order to find a reasonable improvement way,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policy, social capital and corruption. The corruption weakens the social capital that is the driving force of national development. That undermines trust, reciprocity and human networks, and creates distrust and exclusive human relations among members of society. On the contrary, there is an analysis that low-level social capital aggravates corruption.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corruption and the lower the level of social capital, the lower the trust of government and the failure of government policy.

Therefore, in order to stabilize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efforts to control corruption and raise the level of social capital should be concurrently carried out with the search for a rational multi-cultural policy. To present the direction of Korea's multi-cultural policy, in addition, the study searched author's thoughts based on the policy model proposed by Castles and Miller(2003). The authors classify multi-cultural policies as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assimilation model, and multi-cultural model.

\* 동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Based on this finding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stability and successful settlement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be achieved through understanding and concession based on mutual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nts, Korean and society as a whole for integration. In the process, the value of the three policy models will be added to the policy in what field, in what form and to what extent, which will be the key to creating a healthy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Policy, Social Capital, Corruption,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Assimilation Model, Multi-cultural Model.

## I. 서론

현재 우리는 다인종·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전 속도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화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인구와 자본의 이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국내 노동인구의 감소와 저출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저임금 노동력의 필요로 적극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80년대 말부터 국내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여성, 그 이후 탈북자와 조선족으로 대표되는 해외 동포의 유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해 오고 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05만 명 수준에 이르고, 2020년에는 외국인 체류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 여러 갈등을 낳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발 빠른 반응을 보이며 해결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2005년 5월 외국인 문제의 위상을 “대통령 지시 과제”로 격상하고 2006년 4월 국정회의에서 대통령이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발언한 후, 정부 각 부처는 “이주자를 통합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 개발과 입안을 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6년 4~5월 들어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지원방안’(빈부격차별시정위원회),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교육부),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법무부) 등 외국인 일반 또는 특정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며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통신부를 통한 지원 대책을 만들었다(김원 외, 2011: 5-6).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단일민족, 단일문화라는 자긍심이 뿌리깊이 남아있다. 이와 같이 특정 국가의 문화적 특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고 문화의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것은 국가적·사회적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문화사회이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 및

이주자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인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를 지켜주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란 무엇이며,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과정과 현황을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또한 다문화정책과 사회적 자본, 부패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모형이론을 참고하여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 1. 다문화사회의 개념

다문화사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다문화주의가 갖는 철학적·문화적·정치적 의미는 민주주의만큼이나 매우 폭넓고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해석 때문에 한국사회는 아직도 이 개념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다문화정책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김태환, 2015: 22).

다문화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다. 김태환(2015)은 “다문화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문화와 유형의 서로 다른 주변문화를 모두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 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세계주의나 다원주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한다.

김리키는 “다문화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전제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전제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 한다”라고도 하였다(김태환, 2015: 23).

그리고 한 사회내의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병조 외, 2011: 170).

한편,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의 수치상의 다원성을 뜻하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 다른 공동 사회들이 자신들의 속도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보증하고 격려해 주는 하나의 공동 사회를 뜻한다. 동시에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공동 사회들이 기존 문화와 상호작용하고 그 문화를 풍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이 반영된 것을 깨닫는 새로운 합의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한건수, 2010: 132).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국민 통합의 이데올로기, 혹은 운동의 목표를 지칭 한다”라는 견해도 있다(문경희, 2006: 68). 이렇듯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큰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개념에 대해서도 최근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문화에 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자원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다인종간의 공존과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다문화사회를 이끄는 사회구성원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내지는 국제이주자를 들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1).

그리고, 김리카(1995)는 다문화사회를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혹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인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인종이 모인 국가로 구분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나 집단이 이러한 국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 대다수가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김태환, 2015: 19).

## 2. 다문화사회의 형성배경

세계는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전에 의해 사람·재화·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문화권을 만들어 냈다. 경제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에 따른 국제적 분업이 일어났고, 다국적 기업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진행되었다. 이에 맞물려 엘리트 계층이 이동하고, 일자리를 찾는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주자 등 노동자 계층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당연한 결과로 다문화주의는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즉, 어떤 학자나 전문가들의 이론적 연구나 주장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인간의 행태에서 다문화주의가 연구되어지고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이동은 과거에도 항상 있어왔지만, 지금 기술력의 발달이 이동의 속도와 정도를 높였고, 다문화사회를 더욱 확대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은 자유주의 사상과 관련이 깊다. 즉 자유주의가 다문화주의의 수용기반인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 인식하고 사회구성

원 각자에게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사상이다. 자유주의는 휴머니즘의 정점이며, 모든 정치사상의 기초로서 받아들여진다. 이 사상은 근본적으로 다원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김선규, 2015: 227-228). 이런 사상적 관점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가 도출되었고, 경제적 활동이든 문화적 활동이든 혹은 생존을 위해서든, 인류가 이동을 하면서 세계 문명은 발전해 왔다. 즉, 이주민의 국제적 이동은 이러한 세계 인류사의 한 과정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국가 간 빈부격차와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이른바 국가 간 양극화 현상으로 사업목적 또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주자 유입 국가는 노동인력이 필요했고 이주자는 취업 등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국가의 수요와 맞아떨어진 것이다(김판준, 2013: 210).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국제이주로 인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변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 3. 다문화정책의 유형

다문화사회와 그 정책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외국인들이 새로운 나라로 진입하면서 나타난 적응과정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이민정책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호칭으로는 ‘외국인정책’으로, 중앙정부의 호칭으로는 ‘다문화정책’ 또는 ‘다문화가족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김태화, 2015: 58).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정책으로 통일하여 쓰고자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의 정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Castles and Miller(2003), Martiniello(2002) 등은 다문화정책의 유형을 차별적 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모형(assimilation model),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김순양, 2013: 36). 그리고 키피카(2005)는 동화, 통합, 배제, 차이의 인정모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설동훈(2005)은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형으로 구분하고, 다문화모형을 다시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나누기도 한다.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문화다원주의는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는 입장이며,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Castles and Miller(2003)의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으로 다문화정책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차별적 배제모형은 국가가 특정 경제영역에만 이민을 받아들이고, 복지 및 여러 정치, 문화, 사회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차단하는 유형이다(김은미 외,

2009: 32). 바람직한 정책모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다문화정책의 곳곳에 묻어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동화모형은 이주민들이 출신국가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버리고, 이주국가의 주류사회에 순응적으로 편입되어 문화적으로 동질화되는 것이다. 즉, 다양한 국가로부터 유입된 이주민들은 주류사회가 중심이 되는 용광로에서 고유성을 잃고 단일한 성격의 국민으로 동화된다(김순양, 2013: 37). 이 유형은 흔히 용광로모형이라 불리며, 미국의 정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숙주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한국의 경우는 숙주주의가 원칙이고,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민과의 역차별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셋째, 다문화주의모형은 이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고유한 문화와 관습의 유지를 장려하며,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유형이다(김순양, 2015: 37).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물적·인적 교류와 그 속도의 증가로 다문화주의모형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1참고)

표 1. 다문화정책의 유형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
문화적 지향	문화적 배제,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노력 없음	문화적 동질화 추구, 타 문화에 대한 추상적 이해와 수용	문화적 이질성 존중, 다문화에 대한 인정과 보호
정책지향	국가가 원하지 않는 이주자의 영주가능성을 막고, 내국민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함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려 함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를 마련함
정책목표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	소수자집단의 주류사회로의 동화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주류사회와 소수자집단의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국가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관점	이방인, 노동력,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통합의 대상	상호존중과 관용, 다양성의 원천
평등 개념	차별의 정당성 강조	사회보장 및 기회의 평등	적극적 조치
법적 수단	단속 및 추방	소수자집단 차별방지의 법제화(소극적 수단)	제반 권리의 허용, 소수자집단 문화와 권리보호의 법제화(적극적 수단)

정주화	불가능	가능	가능
국적 부여 원칙	속인주의, 엄격한 조건	속지주의, 용이한 조건	속지주의, 이중국적 허용
정체성	이질화	동질화	이질화
갈등해소 방안	배제 및 사전규제를 통한 갈등의 방지	완전한 동화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문제점	불법체류 단속의 강화, 인권침해 문제 등 발생	이주민 동화의 현실적 어려움, 현실적인 사회적 배제	민족정체성 약화 및 사회적 분열 초래

자료: 한승준(2008), 박진경(2010: 266)을 김순양(2013: 39)에서 재인용.

하지만, 실제의 다문화정책을 보면, 어느 하나의 정책모형으로 특정 지어지기 보다는 시기별로 또는 이주민과 내국민들의 성향에 따라 여러 정책모형이 섞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그것이 다문화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4. 다문화정책과 사회적 자본 및 부패의 상관관계

이영현(2006)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개념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 신뢰”라고 정의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정주(2008: 36)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을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으로 나누어, 전자는 부패 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후자는 부패통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부패통제에 긍정적 효과를 내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개념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학자들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이해하면 되겠다.

부패의 개념도 연구자의 주관이나 경험, 시대적 환경,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와 세계은행의 정의가 준용되고 있다. 즉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부패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오용 혹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인들이 보통 이해하는 부패는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횡령과 같은 관료부패만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즉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의 부패 개념은 더 넓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패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네트워크를 저해하고 구성원의 사회활동 참여의지까지 낮추므로 그 부패의 개념은 ‘거짓말을 하는 행위’, 또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

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패 혹은 거짓말은 내국민과 이주민, 이주민과 이주민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해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정부가 아무리 창의적인 다문화정책을 내세워도 그 정책 대상인 내국민과 이주민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패는 다문화 정책 및 사회적 자본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윤은기(2009)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정부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 그리고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부패의 감소, 국민소득의 증가, 노동시장 기능의 효율화 등 사회 발전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정부가 공공의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서,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중요한 변수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을수록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진희(2012)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을 제도, 호혜성, 신뢰, 협력과 참여를 구성요소로 보고, 제도로써 정치적 민주주의, 공정한 사법시스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시스템 등이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호혜성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발전할 때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민이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익의 추구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게 하는 유인이 높아져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시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공익적 활동이 부패를 통제할 수 있으며, 다문화정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경태(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뢰, 법질서 준수 의식, 청렴성 등의 비경제적인 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부패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병섭, 박순애(2013: 3)에 의하면 2013년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팅사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아시아 선진국 중 가장 취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저개발 국가들과 순위를 다투는 실정이라고 한다.

결국,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그 수준을 높일수록 부패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역으로 부패통제가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킨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사회 현실은 아주 복잡하고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부패를 없애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 할수록, 정책대상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정부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부패통제와 사회적 자본을 확대 할수록, 다문화정책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한국 다문화 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 Ⅲ.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

한국이 국제이주의 흐름에서 이주민들의 목적지로 등장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이다. 서울 올림픽을 통해 한국사회와 경제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제1차 걸프 전쟁이 발발하자 동남아시아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을 새로운 목적지로 선택하면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활성화된 것이다(한건수, 2010: 114).

199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필두로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이 증가하였고, 약 178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다.(표 2 참고)

표 2.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2014.10.31. 단위: 명,%)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13년 10월	1,577,300	983,485	370,052	223,763
2014년 10월	1,779,985	1,087,512	412,850	279,623
전년대비 증감률	12.9%	10.6%	11.6%	25.0%
구성비	100%	61.1%	23.2%	15.7%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4)

2012년 6월 기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약 111만 명이며 취업자는 약 90만 명으로, 내국인 취업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서 다문화가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김종갑, 김슬기, 2014: 88). 다문화가정 자녀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0만 명이 넘고 있다.(표 3 참고)

표 3.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만6세 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자녀수	204,204	121,310	49,929	19,499	12,466
비율	100%	59.4%	24.5%	9.5%	6.6%

자료: 행정자치부(2014)

시대가 이렇게 변천하면서 다문화사회는 서서히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는 다문화사회이자 지구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내전을 피해서 가족이나 집단이 이웃 국가로 대거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직업적 차원의 이유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업의 보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활동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하면서 세계 각국을 이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동은 기술과 노하우를 비롯하여 경영방식과 문화 이전이 수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능한 해외 인재의 영입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다문화사회 형성은 국가 발전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김판준, 2013: 211).

한국 정부는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상을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며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를 미래 한국사회의 정책과제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크게 증가했고, 그중 여성결혼이민자가 2004년 초반부터 크게 늘고 있다. 이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감소의 대안으로 농촌총각을 결혼시키자는 사회 요구가 한 원인이기도 했다.(표 4 참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2006년 ‘결혼이민자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비록 결혼이민자에게만 국한된 정책이었지만, 이주민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게 된 상징적 사건이었다.

표 4.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2014.10.31. 단위: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3년10월	14년10월
인원	125,087	141,654	144,681	148,498	150,865	150,828	151,737
전년대비증감률	2.1%	12.2%	2.1%	1.6%	1.6%		0.6%

자료: 법무부(201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후 정부는 이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는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하면서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계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주의적 가치가 한국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한건수, 2010: 116).

## IV. 다문화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 다문화사회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쏟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주민의 관점과 내국민의 관점, 그리고 사회 전체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다문화정책 모형이론을 활용하여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 1. 다문화사회의 문제점

#### 1) 이주민의 관점

이주민들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조차 자신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초기에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한국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에 따라 이주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라는 국제흐름과 한국의 내부적 요인들로 다소 부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으며,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도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속이고 결혼한 배우자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다(한건수, 2010: 115-116). 이런 문제들은 높은 이혼율로 이어지고 있다.

표 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현황

(단위: 천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총 이혼건수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00.0	0.9
외국인과의 이혼	8.3	11.0	11.5	11.1	11.5	10.9	10.5	9.1	-3.7
한국남성+ 외국여성	5.6	7.9	8.2	7.9	8.3	7.9	7.6	6.6	-3.7
한국여성+ 외국남성	2.7	3.1	3.2	3.2	3.1	3.0	2.9	2.5	-3.9

자료: 통계청(2014)

또한, 한국 사회가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다문화주의의 이름으로 이주민의 기본적

인 권리가 무시될 위험이 생겨나고 있다. 이주민들은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생존권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내국민에게만 부여되는 보편적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황정미, 2010: 114).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구제방안을 몰라서 혹은 신변상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김순양 외(2008)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외국인근로자의 41.2%는 “임금체불 관련하여 상담을 해 본 경우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을 해본 58.8%의 응답자중 26.5%는 “본국출신 동료와 상담을 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어 그 동료와의 상담에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김순양, 2015: 232-233).(표 6 참고)

표 6.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경험 및 상담자

(단위: 명,%)

상담경험 여부 및 상담자		빈도
상담한 적이 없다		42(41.2)
상담한 적이 있다	인권센터	9(8.8)
	종교센터	21(20.6)
	한국인 동료	3(2.9)
	자국 동료	27(26.5)
계		102(100)

자료: 김순양 외(2008).

그리고, 우리의 다문화정책과 이론은 인종적 차이를 비가시화하고 배제하거나 우회하는 경향이 있다. 분명 현실에 존재하는 인종 문제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에 비해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또는 흑인 이주민이 소수라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만약 이들이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더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즉 피부색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버젓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종 문제는 다루기가 매우 불편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그리고 다문화라는 단어가 문화적 다양성과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질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며 우리의 현실이다(서윤호, 2012: 283-284).

최근 다문화 현상이 농촌과 도시의 소외계층이 결합하여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집단적 차별이나 적대감을 갖는 등 인권침해와 더불어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나타나고 있고 소외계층을 양산시키고 있다(김판준, 2013: 219).

그리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문화 정책 입안과 실천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단어

의 본질적인 의미가 왜곡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방식도 점점 축소되어버렸다. 특히 ‘다문화가족’이라는 단어가 마치 모든 다문화적 상황의 전부인 것처럼 변질되어버린 것, 그러면서 다문화적 상황이란 마치 가난한 나라 출신 엄마들과 그 자녀들의 문제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게 만든 오류는 앞으로 두고두고 고쳐나가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 2) 내국민의 관점

이주민들의 불만만큼이나 내국민 입장에서의 불만 또한 다양하다. 우선, 결혼이민자에 대해 능력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원에 따른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전락한 이주자들은 범죄 집단에 가담하거나 이주자들이 인종과 임금차별 등을 이유로 집단으로 파업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김판준, 2013: 212).

그리고 극빈자인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의 가정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정착금이나 지원금을 보태주는 것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정착금을 주고 대한민국 시민에 준하는 보험 혜택이나 몇몇 제도적 혜택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강미옥, 2014: 255). 이것은 지금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집중하다보니 ‘다문화 시민교육프로그램’등과 같은 국민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김판준, 2013: 213).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한편 ‘외국인 범죄척결연대’의 한 공동대표는 자신들의 주장을 적은 36쪽의 문건을 법무부의 공청회에서 제출한 일이 있었다. 이 글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현황을 요약한 것인데, 예를 들면,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편을 이용한 사례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여성들과 결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범죄자’인 외국인을 우대함으로써 한민족을 차별하고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한건수, 2010: 123).

이렇게 반다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에 비판적이거나 거부감을 갖는 등 대안의 제시보다 갈등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인 유입이 우리 노동시장을 점유하고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김판준, 2013: 209). 그리고 계속 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사회의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법무부는 2014년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표 7 참고)

표 7. 불법체류자 총괄 현황

(2014.10.31. 단위: 명,%)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13년10월	183,694	97,050	85,136	1,508
2014년10월	200,060	94,976	103,414	1,670
전년대비증감률	8.9%	-2.1%	21.5%	10.7%

자료: 법무부(201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호주는 이주민들 중에서 특히 이슬람 집단과 갈등이 심하다. 그리고 포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추구했지만, 결국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주민들의 탓으로 돌렸다. 즉 통합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이주민들이 외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주장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신자유주의적 변화 때문이다. 즉 국가의 경제적 사정이 나쁜 상황에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회 균열을 조장하는 이주민 집단들의 존재를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여러 이주민 집단들이 사회 통합에 대해 비협조적이고 위협이 되기까지 하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있다(전경옥, 김현숙, 2010: 6).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도 자국에서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했다는 소식도 있다. 네덜란드의 헤르트 빌더스같은 우익정치가의 약진과 그의 반이슬람 발언이 네덜란드 법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은 유럽에서 다문화사회를 포용하는 다문화정책이 전면 후퇴하고 있는 것을 한국사회에 보여주고 있다.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한국 사회에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표현이 각종 사이트에 등장하면서 반이민 혹은 반다문화정책 운동이 힘을 받기도 했다(한건수, 2010: 123-124). 이렇듯 내국민의 비판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 3) 사회 전체적 관점

한국 다문화사회는 이주민과 내국민간의 갈등 이외에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봐야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맞고 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급한 불을 끄듯이 다문화사회 관련 담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단순히 계몽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정착을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정책이 중복적이고 일회성 집행이어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다문화 혐오증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사회의 이러한 혼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한건수, 2010: 117).

이러한 다문화 혐오증은 이주민들을 특정지역으로 내몰았다. 문제는 이주민의 거주지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고 또 분리되는 가운데, 단순 기능 인력 이주민의 거주지가 일반적인 빈곤층 지역으로 집중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배제와 사회 공간의 양극화를 야기하여 사회 전체의 통합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최웅선 외, 2013: 144-145).

그리고 최근 국내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다문화사회와 관련하여 그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깊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즉,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용어들의 오용과 혼용으로 학문적 토론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이다. 특히 학술논문에서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를 언급할 때 이 용어들이 나타내는 의미의 다양성을 모르고, 자의적으로 그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사회’를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사회 내 이질성이 증가된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학자와 다문화주의로부터 연역하여 다문화주의가 관철되는 사회로 사용하는 학자의 경우 서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와 용도는 다르다는 것이다(한건수, 2010: 118).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사회에 관한 논의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문적·이론적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결국, 다문화주의의 고상한 이념과 현실의 차이가 한국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한계인 것이다. 지배적인 문화가 우위를 차지하는 현실의 다문화사회는 소수문화를 ‘관용’이나 ‘혜택’의 차원에서만 허용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다문화사회는 그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가 그리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다. 소수문화가 다수문화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느껴질 때, 관용과 혜택의 정신은 사라지고 소수문화에 대한 공격과 탄압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대두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내국민의 불만이 외국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다(김태식, 2012: 93).

다문화사회가 아닌 단일민족사회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력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즉 다문화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차이가 민족 집단 간에 나타날 것이고 갈등 또한 심할 것이다. 민족 집단 간의 경제적 차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낳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인권문제, 정치적 문제로 나아갈 것이다. 사회적 통합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다문화가 사회를 파편화하고 국민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테러행위는 정부차원에서 이주민들과 외국인을 주요 감시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내국민들에게 애국심을 부추기거나 혹은 강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내국민들이 이주민들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점점 커지는 현상은 한국 다문화사회를 결국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다문화사회가 향후 겪게 될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애국심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내국민에게도 절대적인 애국심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물며 이주민들에게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 통합을 위해서 애국심은 필수적이다. 앞으로 많은 전문가와 국민, 그리고 이주민간의 깊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 2. 개선방안

### 1) 이주민의 관점

다문화주의는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국에서 채택한 다문화정책은 각각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가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이주자가 가져오는 새로운 가능성과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김현미, 2014: 196). 이주민들은 우선 일 자리를 찾아서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권과 경제적 권리에 매우 예민하다. 임금문제가 그중 하나이다. 우리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OECD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내국민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인권문제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 거주하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점차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체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한국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만큼,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42개국이 비준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귀국할 권리, 가족을 동반할 권리 등의 기본적인 노동자의 인권보장에 힘써야 하겠다(김태환, 2015: 257).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결성은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와 고용주를 향해서 그들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근로기준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더욱 보완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김판준, 2013: 230).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불확실한 정보에 의한 사기결혼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마련 되어있지만, 이 제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비국민의 권리도 인정한다. 비국민의 권리 개념을 확장하는 일이 곧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한 방법이다. 국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신자유



주의 경제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이주민과 내국민이 모두 구조적 희생자임을 이해해야 한다. 내국민과 이주민은 사법적으로는 차별적 범주에 속하지만, 자신의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향유자로서는 동등한 자격을 지닌 것이다(김현미, 2014: 232-233). 이러한 상호간의 이해는 제도적인 교육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주민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의 시민교육과 이주민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이주민의 자녀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이주민과 관련한, 주로 한국으로 이주해온 결혼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은 사실상 시민적 역량과 국가적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도 역점을 두고 교육해야 하는 대상이 빠져 있다. 바로 주류 한국사회의 시민교육과 일반학교의 초·중·고·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다(김태환, 2015: 267).

한편, 현재 다문화 전문 인력의 전공은 여러 분야에 걸쳐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몇 대학에서 학부과정, 대학원과정에 이민자 관련 강좌와 전공 개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전문 인력의 다문화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증제 도입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이성순, 2011: 264). 그리고 이 전문가들을 통한 교육이 이주민들에게 쉽게 제공되어 이들의 시민의식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사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3D 업종에만 종사하는 하류층에 속한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그런 이유로 차별과 편견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무원, 교수, 연구원, 변호사, 항공기 승무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의 미래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김판준, 2013: 219).

## 2) 내국민의 관점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만큼,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내국민의 행복과 경제를 포함한 국가발전의 문제이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은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선심성 정책은 오히려 일부 시민들과 갈등을 부추기고,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려는 자활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취업하는 등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이 바람직하고, 우리 국민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판준, 2013: 22).

그리고 이주민 집단이 정치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이주민의 수가 다소 적지만 점차 그 인구가 커질 때 이 문제는 심각한 국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물론 이주민

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에 대응하여 정치적 기본권도 부여되어야 하겠지만, 많은 토론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 민족 집단 내에서 있을 수 있는 비민주적 관행이나 개인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문제는 인종이나 민족 간의 문화의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도 있지만, 경제적 차이로 인한 갈등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경제적 희망이 있을 때 소수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전경옥, 김현숙, 2010: 25-26). 다시 말해서 이주민들의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이주민 집단의 불만은 정치적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국내 정치적 혼란에 이러한 문제까지 더해지면 국가발전에 큰 저해를 가져올 것이고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노동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인력을 확보하더라도 내수시장을 고려한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도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자 중남미 이민을 대폭 받아들여 저가의 노동력을 보강한바 있다. 우리나라도 다수의 젊은이들이 꺼려하는 단순노동 인력의 도입뿐만 아니라 외국인재 확보가 절실하며, 재외동포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재외동포 출신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일 것이다(김판준, 2013: 217).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은 정계·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역할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은 물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외무부는 2017년 기준, 175개국에 약 7백 18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양명호, 지충남, 2017: 4). 법과 제도를 통해 이 수많은 재외동포들 중에 우수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주민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정책이 성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중문화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재외동포이다. 특히 재외동포 2세를 껴안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재외동포에 대한 거부반응부터 없애야 한다. 또한 캐나다의 이민청과 같이 총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 다문화 정책이 결실을 얻으려면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세계 주요국가의 수준에 맞는 인격과 행위가 있어야 하고, 선진국에 준하는 세계관 또한 갖추어야 한다(현용수, 2011: 181-182, 김판준, 2013: 223-224에서 재인용).

### 3) 사회 전체적 관점

우리는 그동안 사회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한국사회의 가족개념과 가족으로부터

확장된 혈연중심의 민족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담론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인종에 의해서 구분되고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이제 지구촌에서 민족이나 인종개념은 공동체의 계급간의 차별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없어져야 할 것이다(김태환, 2015: 251).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다른 나라와의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인종·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며, 특정 국가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정책 역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다문화사회의 초기단계를 넘어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속히 연구하고 이를 우리 사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먼저 국제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를 통해 세계적 수준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의 현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고, 다른 나라와의 연구 교류를 통해 생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제적 관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김병조 외, 2011: 231).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연구의 축적이 많지 않고 더욱이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므로 외국 사례의 문헌연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유학생과 지역주민 간 상시적 교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로의 이질문화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대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이 관할 지역의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유학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만의 1:1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상호문화 이해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09: 14).

그리고 지역단위로 다문화관련 기관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계 가능한 파트너를 두어 지역적 네트워크 확립을 통해 다문화 정책을 집행하고 작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통합형 다문화사회전문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고, 인력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성순, 2011: 263-264).

한편, 이주민 밀집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다문화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모든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이러한 이주민 밀집 지역을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밀집 지역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주민 밀집 지역이 일반 사회로부터 고립된 지역에서 벗어나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최웅선 외, 2013: 146).

이러한 다문화정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으로 구현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부정책의 배경과 토대가 되는 가치체계나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주민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국가나 사회에게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의 성공 여부는 그 이주민을 대하는 사회 공동체 시민들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김태환, 2015: 265).

결국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철학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세운 정치철학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세우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는 갈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집중적인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부처에 하나의 담당 부서가 있는 정도로는 전문적인 문제의식과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가 부족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전경옥, 김현숙, 2010: 24).

그리고 우리사회에 미치는 이주민들의 경제적 기여나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많은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사회적 기여가 사실이라는 확인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의 이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과 배려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 3. 소결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있어서 그 문제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일부를 눈에 들어오기 쉽게 세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 다문화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본 논문에서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주민과 내국민 상호간의 신뢰와 호혜성 그리고 제도와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아직 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저자가 다문화정책, 사회적 자본, 부패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문화정책 이론을 살펴본 후 들었던 생각은, 우선 우리의 사회적 자본, 즉 사회구성원간의 인적 네트워크, 호혜성 규범, 상호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 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신뢰의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의 형성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마다 동화나, 배제나, 통합이나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준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윤은기(2009)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낮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정책실패의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아무리 합리적인 다문화정책을 내 놓아도 그 정책의

대상인 내국민과 이주민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취약해서 부패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정태(2011: 217)에 의하면, 부패의 심화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부패가 심할수록 국민과 정부, 사인과 사인, 내국민과 이주민간의 신뢰와 호혜성, 인적 네트워크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제의 사회 현상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알게 모르게 상호간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결국, 한국 다문화사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다문화정책을 만들어내려는 노력과 함께, 부패를 통제하고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의 모색과 관련하여 본 저자는 Castles and Miller(2003)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정책모형에 주목해 보았다. Castles and Miller(2003)는 다문화정책의 유형을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1 참고) 우선, 이주민의 관점에서 본 문제들은 동화모형과 다문화주의모형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잡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모형의 특징과 가치관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여 이주민과 내국민을 설득시키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내국민의 관점에서 본 문제들도 동화모형과 다문화주의모형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하겠지만, 내국민 역차별 문제라든가, 국가 정체성 문제와 관련한 예민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약하게나마 차별적 배제모형의 가치관도 정책에 가미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본 문제들은 결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문제제기로 봐야 할 것이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종착지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방향은 다문화주의모형의 결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 다문화사회의 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과 내국민 그리고 통합을 위한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즉, 부패를 통제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Castles and Miller(2003)의 세 가지 정책모형의 특징과 가치관을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정책에 가미시키는가가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관건이 될 것이다.

## V. 결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의 흐름으로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사회라는 국가적 관심거리를 한국에 가져다주었고 그에 따른 갈등과 대안의 필요성은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노동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

한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미국, 호주, 또는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살아가는 다인종 국가로 변해갈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는 사회 여러 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다양한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행사를 비롯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한국은 정치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다문화사회가 직면할 사회적 통합의 과제를 위해 국가 정책의 철학적 토대를 신중하게 연구할 때가 되었다. 다문화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이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정부는 인종차별과 국민 역차별이 없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국가적·사회적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자세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즉 다문화사회를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다문화사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들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혹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들의 경험이 한국 다문화사회에 제시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부패통제와 사회적 자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요소는 다문화정책, 더 나아가서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부패문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신뢰, 호혜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강조되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역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호혜성, 인적 네트워크를 약화 시키고, 서로간의 불신과 배타적 인간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제 막 다문화사회로 들어선 한국에서 부패가 초래하는 불신과 배타적 선입관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목표인 사회통합을 해치고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것이며 결국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다문화정책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서 다문화정책모형에 대한 이론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Castles and Miller(2003)가 언급한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을 정책의 큰 방향으로 잡고, 이 세 가지 모형의 특징과 가치관을 정책의 내용에 적절히 안배하여 가미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특징과 가치관을 이주민과 내국민에게 계속 알리고, 설득하여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것은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한국 다문화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 실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앞으

로의 발전적 방안을 찾는 데에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 순혈주의의 망상이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과의 소통, 조화로운 삶은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우리의 의식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 사회는 혼란해질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각자 스스로가 세상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고, 앞을 내다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1) 단행본

- 강미옥. (2014).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상상너머출판사.
- 김병섭 · 박순애. (2013). 『한국사회의 부패』. 박영사.
- 김병조 · 김복수 · 서호철 · 오만석 · 은기수 · 정미량 · 정재기 · 조동기. (2011).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김복수 · 김원 · 서덕희 · 서종남 · 서호철 · 유성용 · 오만석 · 정미량. (2011).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매진출판사.
- 김순양. (2013).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집문당출판사.
- 김은미 · 양옥경 · 이해영. (2009).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출판사.
- 김태환. (2015).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출판사.
- 김현미. (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돌베개 출판사.
- 설동훈. (2005).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한국사회론(김영기 편)』. 전북대학교 출판부.
- 최웅선 · 이진만 · 김준모. (2013).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은 어디에서 사나?』. 대영문화사.

#### 2) 논문 및 학술지

- 김선규. (2015).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문화와 관용의 문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8집.
- 김순양 외. (2008). 저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아태연구』, 15(2).
- 김종갑 · 김슬기. (2014). 다문화사회와 인종차별주의. 『다문화사회연구』, 제7권 2호.
- 김판준. (2013).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기여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3권 2호.
- 김태식. (2012). 다문화주의의 한계와 대안 모색. 『다문화와 인간』, 제1권 제1호.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 서윤희. (2012). 다문화주의와 문화 다양성. 『일감법학』, 제23호.
- 양명호 · 지충남. (2017). 재외동포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고찰. 『재외한인연구』, 제42호, pp. 69-94.
- 윤은기. (2009). 신뢰와 사회발전. 『한국부패학회보』, 제14권 제4호, pp.67-85.
- 이경태. (2011). 『사회보장, 양극화, 사회적 자본과 공직부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OECD회원국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이성순. (2011).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과 과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0집.
- 이영현. (2006). 사회적 자본 연구동향. 『직업과인력개발』, 가을.
- 이정주. (2008).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OECD 국가간 비교연구: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Vol.13 No.2, pp.35-52.
- 장진희. (2012).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비교』.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전경옥 · 김현숙. (2010). 미국 다문화주의를 통해 본 다문화주의 정치 철학의 딜레마와 한국에의 함



- 의. 『다문화사회연구』, 제3권 1호.
- 한건수. (2010).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제 1권 제1호(창간호).
- 현대경제연구원. (2009). 경제주평-국내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2010). VIP REPORT-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시사점.
- 황정미. (2010). 다문화 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담론』, 제13권 제2호.

## 2. 국외문헌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Third Edition*, New York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 Kymlica, Will. (1996).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ymlica, Will. (2007). *Multicultural Odysseys: Navigating the New International polotocs of Diver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ymlica, Will. (1996).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다문화주의 시민권, 장동진 옮김, 2010, 파주: 동명사.

## 3. 기관 발표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3). *The 2013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http://www.transparency.org/cpi2013>.
- World bank. (2017). *What is Fraud and Corruption?*. <http://www.worldbank.org/en/about/unit/integrity-vice-presidency/what-is-fraud-and-corruption>.

투고일자 : 2018. 02. 07

수정일자 : 2018. 03. 27

게재일자 : 2018. 03. 31

&lt;국문초록&gt;

## 한국 다문화사회에 관한 고찰: 다문화정책, 사회적 자본, 부패 중심으로

김 수 진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과 국내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에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이주민의 관점, 내국민의 관점,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주민의 관점에서는 주로 차별적 대우가 문제가 되었고, 내국민의 관점에서는 역차별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는 사회통합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다문화정책과 사회적 자본, 부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부패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사회적 자본, 즉 신뢰와 호혜성, 인적 네트워크를 약화 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과 배타적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역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부패를 가증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부패가 심하고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신뢰가 낮고, 정부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합리적인 다문화정책의 모색과 함께, 부패통제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정책의 큰 방향을 잡을 때 Castles and Miller(2003)가 제시하는 정책모형에 입각하여 본 저자의 생각을 밝혀보았다. Castles and Miller(2003)는 차별적 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모형(assimilation model),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다문화정책을 분류하고 있다. 결국, 한국 다문화사회의 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과 내국민, 그리고 통합을 위한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양보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정책모형의 가치관을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정책에 가미시키는가가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관건이 될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 사회적 자본, 부패,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